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 출장 개요

☐ 출장목적

- 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 개최

☐ 과제명

- [수탁26-002-01]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

☐ 출장기간

- 2026.09.17.(목) ~ 2026.09.19.(토)

☐ 출장국가(도시)

- 일본(동경)

☐ 출장자

- 함영진 선임연구위원, 이영숙 연구위원, 조용찬 연구원, 정유경 연구원, 김승일 과장, 홍영주 전문위원(사회보장위원회)

☐ 일정요약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2026.09.17.	일본(동경)	후생노동성	후생노동성 담당자	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-후생노동성
2026.09.18.	일본(동경)	IPSS	IPSS 담당자	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-IPSS
2026.09.19.	일본(동경)	IDE-JETRO	WATANABE Yuichi	한일 노인돌봄제도 운영 사례 관련 자문
2026.09.19.	일본(동경)	메이지가쿠인대학교	손의 섭	일본 저출산 및 사회보험 정책 동향 관련 자문

2 출장 주요내용

①	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 - 후생노동성
일 시	09.17(목) 15:00~17:00
장 소	동경(일본 후생노동성)
참석자	AKAGAWA Ryo, IRISAWA Yu, KAKUCHI Takahiro, ITO Masashi(후생노동성), 김승일 과장, 홍영주 전문위원(사회보장위원회), 함영진 선임연구위원, 이영숙 연구위원, 조용찬 연구원, 정유경 연구원(KIHASA)
○ 사회보장 추진체계 - 한국은 사회보장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, 부처 간 조정·평가, 재정 산출·전망, 통계·데이터 관리 담당 - 일본은 종합 조정기구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없이 분야별 계획·회의체로 상황별 대응(사회보장국민회의,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본부, 아동가정청, 사회보장심의회, 경제재정자문회의) - 일본 개혁의 3대 축은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인 사회보장, 의료·개호 개혁, 지역공생사회 ○ 재원 및 재정 안정 - 제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 목표를 설정해 보험료 인상 억제 -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 인하·급부형 세액공제 논의 중, 소비세 인하는 내년 4월 도입 예정 - 조세·보험료 부담 비율은 후생노동성과 재무성이 매년 협의, 2년 한정 소비세 감세는 후생노동성에도 부담 요인 - 연금 거시경제슬라이드는 물가·임금에 따라 자동 조정되어 정치적 결정 부담 완화 및 제도 적정화에 기여 ○ 의료보험 개혁 - 2026년 6월 법 개정으로 출산비용 보험급여화, 후생노동성·아동가정청 공동 검토회(1년간, 지자체장 참여)와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를 거쳐 합의 - 재정 개혁의 초점은 고령자 부담 적정화 - OTC 유사 처방약 본인부담 인상(저소득층·장기치료약은 예외), 70세 이상 3할 부담 대상(현역 수준 소득자) 확대 검토 ○ 개호 및 지역포괄케어 - 30분 생활권 안에서 의료·개호·예방·주거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 - 국가 지침 → 도도부현 조정 → 시정촌 계획 수립 순으로 추진, 국토교통성(고령자 주택)·경제산업성(개호기술)과 협력 - 주민 자발성과 인력이 부족해 고령·장애·아동을 함께 지원하는 인재 양성 필요 - 비용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정량자료는 없으나 과잉지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○ 저출산 및 인구 - 2030년까지 청년 임금 인상, 모든 육아가정 지원, 맞벌이·공동육아 등 어린이미래전략 추진 - 수치상 성과는 미흡하나 아동·임산부 지원 강화 지속	

- 외국인 수용 정책이 인구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인식 - 한국 측은 출산을 반등 배경으로 정책 누적 효과, 인식 변화, 코로나 이후 일·가정 문화 변화를 공유	
②	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 - IPSS
일 시	09.18(금) 10:00~17:00
장 소	동경(IPSS)
참석자	HAYASHI Reiko, TANAKA Kenichi, KIMURA Takeshi, TAKEZAWA Junko, YOKOYAMA Maki(IPSS), 김승일 과장, 홍영주 전문위원(사회보장위원회), 함영진 선임연구위원, 이영숙 연구위원, 조용찬 연구원, 정유경 연구원(KIHASA)
○ 한국 사회지출(SOCX) 통계 - OECD 기준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산출, 2년 주기로 제출 - 공공·법정민간·자발적민간 3개 부문, 노령 등 9개 정책영역으로 구성 - dBrain, e-나라도움, e-호조, 공공기관, 4대 보험 자료 활용 - 사업 분류 방식을 수작업·키워드 매칭에서 LLM 활용으로 전환 - 228개 기초지자체 지출 지도 작성, 원천데이터·MCP 코드 공개 검토 중 ○ 일본 사회보장비용통계 - ILO·OECD·ESSPROS 3개 기준 병행 산출 - 사업주 거출 비율 국제비교를 정책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 - 재무성 결산 → 부국 배부·회수 → 약 50개 제도별 DB 구축 순으로 작성, 매년 7월 말 공표 - 실무자 3명이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효율화·표준화가 과제 ○ 한국 사회보장 재정추계 -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, 2년 주기(2026년 상반기 6차)로 40년 전망 - 8대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대상, 지출 측만 추계(기준선 전망) - 6차 결과 노인 비중 40% 초과(2050), 노년부양비 99명(2065), 실질성장률 0.2% - 사회보험·의무지출 확대가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 - 국가데이터처 신규 인구추계(출산율 반등 등) 반영 예정 ○ 일본 사회보장 장래추계 - 법정 추계가 아니며 정부가 필요할 때 시행(2018년 「2040년을 내다본 사회보장 장래 전망」) - 연금은 거시경제슬라이드로 안정되어 의료·개호 비용과 종사자 수 추계에 관심 집중 - 수요는 이용률×인구, 단가는 임금·물가 가중치로 경제와 연동 - 돌봄인력 추계는 의료·개호 중심, 장애 등은 개별 제도에서 별도 추계	

③	한일 노인돌봄제도 운영 사례 관련 자문
일 시	09.19(토) 10:00~12:00
장 소	동경(IDE-JETRO)
참석자	WATANABE Yuichi(IDE-JETRO), 김승일 과장, 홍영주 전문위원(사회보장위원회), 함영진 선임연구위원, 이영숙 연구위원, 조용찬 연구위원, 정유경 연구원(KIHASA)
○ 일본 개호보험 운영 구조 - 2000년 시행,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지역 단위 운영 - 피보험자는 1호(65세 이상)와 2호(40~64세, 특정질병 한정)로 구분 - 재원은 보험료 50% · 공비 50%, 이용자 부담은 원칙 1할(소득에 따라 2~3할) - 3년 단위 사업계획의 서비스량으로 1호 보험료 산정, 개호보수도 같은 주기로 개정 - 시정촌별 1호 보험료 격차는 조정교부금(국가 부담분 중 5%)으로 일부 보정 ○ 지역포괄케어와 개호예방 - 지역포괄지원센터: 일상생활권역(대략 중학교구) 단위 원스톱 창구, 보건사 · 사회복지사 · 주임케어매니저 배치 - 종합사업: 요지원자 방문 · 통소 서비스를 시정촌 사업으로 이관, 주민 · NPO 참여로 부담 분산 ○ 재정 지속가능성 대응 - 2027년도 제도 개정을 앞두고 2할 부담 대상 확대 논의 중 - 배려조치로 부담 증가분 월 7,000엔 상한, 저자산자 1할 환원 검토 ○ 돌봄인력 확보 - 개호직원 약 215만명(2022) → 필요 인원 약 240만명(2026), 약 272만명(2040) - 처우개선가산 일원화(2024), 외국인 인력 유입 경로 다양화(특정기능 · 재류자격 '개호') - 개호 DX · LIFE(과학적 개호 데이터)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○ 한국 노인돌봄제도와 비교 -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(2008)은 건보공단 단일 보험자, 본인부담은 재가 15% · 시설 20% - 통합돌봄법 2026.3.27 전국 시군구 시행, 노인맞춤돌봄 · 장기요양 등 서비스 연계 - 일본은 시정촌이 보험과 지역포괄케어를 함께 운영, 한국은 공단과 지자체로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연계 · 재원 조정이 과제	

④	일본 저출산 및 사회보험 정책 동향 관련 자문
일 시	09.19(토) 13:30~15:30
장 소	동경(메이지가쿠인대학교)
참석자	손의섭(메이지가쿠인대학교), 김승일 과장, 홍영주 전문위원(사회보장위원회), 함영진 선임연구위원, 이영숙 연구위원, 조용찬 연구원, 정유경 연구원(KIHASA)
○ 일본 저출산 현황 - 2025년 출생아 수 67만 1천명, 합계출산율 1.14로 10년 연속 최저 경신 - 혼인 건수 48만 9천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- 도쿄 합계출산율 3년 연속 1 미만 ○ 어린이미래전략(가속화플랜) 추진 현황 - 2023년 수립, 연 3.6조엔 규모로 저출산 대책 집중 확대 - 아동수당: 소득제한 철폐, 지급 대상 고교생까지 연장, 셋째 이후 월 3만엔(2024.10~) - 육아휴직: 부모 모두 14일 이상 휴직 시 최대 28일간 급여율 80%(실수령 100% 상당), 단축근무 시 임금의 10% 지급(2025.4~) -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: 부모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보육시설 이용, 2026년도 전국 시행 - 출산비용 보험급여화(2026 법 개정)로 임신부 본인부담 무상화 ○ 저출산 재원(어린이·육아지원금) - 2026.4부터 의료보험료에 얹어 징수, 전 세대와 기업이 분담 - 규모는 2026년도 약 6천억엔 → 2028년도 약 1조엔으로 단계 확대 - 사회보장 세출개혁으로 실질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 ○ 연금 개혁(2025년 개정법) - 단시간 노동자 적용 확대: 106만엔 임금요건은 공포 후 3년 내 폐지, 기업규모 요건은 2027.10부터 단계 축소해 2035.10 폐지 -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 월 50만엔 → 65만엔 상향(2026.4) - 표준보수월액 상한 65만엔 → 75만엔 단계 인상(2027~2029) - 2029년 재정검증에서 기초연금 수준 저하가 예상되면 거시경제슬라이드 조기 종료 ○ 의료·개호보험 부담 조정 - 고액요양비: 2026.8부터 월 상한 단계 인상, 연간 상한 신설 - 의료: OTC 유사약 본인부담 인상, 70세 이상 3할 부담 대상(현역 수준 소득자) 확대 검토 - 개호: 2027년도 제도 개정을 앞두고 2할 부담 대상 확대 논의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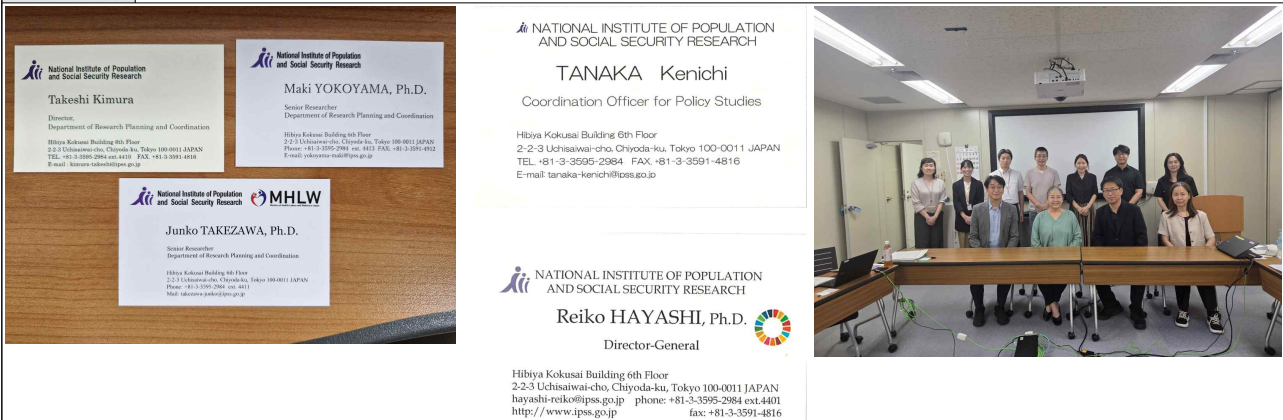
①

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 - 후생노동성



②

한일 사회보장 재정 세미나 - IPSS



③

한일 노인돌봄제도 운영 사례 관련 자문



④

일본 저출산 및 사회보험 정책 동향 관련 자문

